

국가산단 안전점검 지자체 이관 촉구 결의안

(이복희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151
----------	------

발의연월일 : 2015. 7. .

발 의 자 :

1. 주 문

붙임 “결의안”과 같음.

2. 제안이유

가. 국가산단의 안전점검 권한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과 산업 안전보건법 등 개별법에 의해 정부에서 총괄하고 있어 총괄 공정 안전진단이 어렵고 사고발생시 대처 및 예방책 마련까지 비효율적이라 국가산단 안전점검 권한의 지자체 이관이 시급함

3. 주요내용

가. 지역특성과 상황에 맞는 행정지도와 사후 행정조치가 가능하도록 국가산단 안전점검 권한 지자체 이관 촉구

국가산단 안전점검 관한 자자체 이관 촉구 결의안

세월호 사고가 일어난지 1년이 지났으나 온전한 수습이 되지 않은 가운데 시민(국민)들 가슴에 멍에로 남아 있다.

우리는 대형사고가 나면 ‘안전불감증’이란 다섯 글자로 모든걸 대충 덮고 지나간다. 하지만 지난 7월 3일 7명의 사상자를 낸 한화케미칼 폭발사고는 울산 시민이 체감하는 불안감을 고려해 볼 때 결코 안전불감증이란 말로 마무리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아직 사고에 대한 정확한 수사결과는 나오지 않았지만 밀폐된 저장조 내부 가스를 측정하지 않고 작업을 했다는 설명으로 미루어 보아 ‘작업 전에 엄격한 안전점검을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50년이 넘는 노후된 울산의 국가산단에서 사고가 난다는 것은 이제 드문 일이 아니다. 2009년부터 6년간 232건의 폭발 및 화재사고로 54명의 사상자가 났고 52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울산의 국가산단을 '화학교'라고도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만큼 불안감이 팽배해 있는 것이다.

현행 국가산단의 안전점검 관련 업무는 정부에서 총괄하고 있다. 국민안전처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국가산단 내 업체들의 안전을 관리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울산시 등 지방자치단체는 개별법에 의한 특정 분야만 접근하고 있다.

실제 이번 한화케미칼 폭발사고 때에도 울산시는 사고 현장에 접근조차 하지 못했다. 개별법에 따라 광역 또는 기초지자체가 소방이나 유독물, 가스 등 분야별 인·허가와 정기점검만으로는 총체적인 안전문제를 짚어내기 어렵다.

개별법에 따른 소극적인 대응을 넘어서 전 체계 공정 관리에 지자체가 적극 참여하는 능동적인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며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을 개정하여 국가산단 안전점검 등 안전관리 권한을 지자체에 이관해야 한다.

현재 울산에는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와 온산국가산업단지 등 2개 국가산단에 1,200개 업체가 입주해 가동중이다. 24만 우리 중구민중에도 많은 분들이 국가산단에 근무하고 있다. 그리고 중구 장현지구는 국토부에서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지정하여 향후 더 많은 중구민들이 목숨을 담보로 산단에 근무하게 된다.

울산에서 사고가 나더라도 울산시는 사고현장 접근조차 할 수 없고 울산시 차원에서 사후수습대책 마련이나 향후 이같은 사고에 대비한 행정대응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우리 24만 중구민들의 안전과 나아가 110만 울산시민의 안전은 보장될 수 없다.
이에 우리 중구의회는 24만 구민의 안전을 위해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개별법에 의한 관리는 특정 분야에만 국한되어 총괄공정에 대한 안전진단에 한계가 있으므로 지역특성과 상황에 맞는 사전 행정지도와 사후 행정조치가 가능하도록 안전점검 권한을 지자체에 이관할 것을 촉구한다.

2015년 7월 23일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일동